

美, 암호화폐 규제 놓고 찬반 대립

인프라 재원 마련 대안 속 "브로커만 신고 의무화" vs "시장 위축"

미국 정치권에서 사회기반시설 예산 확충을 위한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화당 패트릭 투미 상원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과 산업계는 1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예산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상세히 보고하지는 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과 공화당 소속의 톱 포트먼 상원의원이 국제정(IRS)에 암호화폐 거래 신고 수준을 상향하는 데 합의하자 반발한 것이다. 이 방안은 여야가 예산 확충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몇 달간 협상을 벌인 끝에 마련했다.

정확히 시행될 경우 자발적인 암호화폐 거래 내역 신고를 늘리는 한편 IRS는 이를 근거로 세금 회피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전문학적

규모의 인프라 법안 재원 마련을 위해 여야가 속신 각산하던 중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대해 초안에 담긴 규제 조항이 너무 광범위해 암호화폐의 브로커뿐만 아니라 비집중형 네트워크 거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이른바 '비트코인 채굴자'까지 엄중히 단속해 위축시킨다는 게 투미 의원의 주장이다.

은행위원회 소속인 투미 의원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회가 세금 신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서둘러서는 안된다"라며 "지금 방안으로는 안되고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포트먼 의원은 대변인을 통해 "법안 초안에서 브로커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채굴자에게 IRS 보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라며 "다만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든지 브로커 역할을 할

때만 보고를 의무화했다"고 반박했다.

법안 초안은 크게 2가지로 우선 1만 달러 이상을 암호화폐로 지출시 IRS 보고를 의무화하고, 나머지는 암호화폐 브로커의 정의를 명확히 하면서 이들의 특정 디지털 자산 거래 내역도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산업계가 반발하는 부분이 두 번째 조항이다. 정부 감시에서 빚겨나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동안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엄청난 속도로 커졌기 때문에 당국이 개입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2008년 개념이 처음 알려진 이후 현재 전 세계 비트코인 규모는 6000억 달러(687조 4200억원)로 불어났다.

다만 정부 당국이 개입할 경우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자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업계의 반발에 따라 IRS 보고를 강화하려는 법안이 약화될 경우 인프라 예산의 재정 확충 방안이 흔들릴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연합뉴스



벨라루스 반체제 인사 의문사 진상조사 촉구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벨라루스 대사관 앞에서 활동가들이 의문사 한 벨라루스 반체제 인사 비탈리 쉬스프(26)의 사진을 든 채 그를 추모하고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벨라루스 정부의 탄압을 피해 이곳으로 이주한 벨라루스인들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일자리,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운동단체 '우크라이나의 벨라루스인 집' 대표인 쉬스프는 실종 하루만인 이날 자택 인근 한 공원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코로나 발생 1년 7개월...전세계 누적 확진자 2억명 넘어

사망자 425만6000여명
세계인구 28% 백신접종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억명을 넘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원인 불명 폐렴'으로 알려진 2019년 12월 31일부터 따지면 약 1년 7개월만이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한국시간 4일 오전 6시 30분 현재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억14만 9000여명이다. 세계인구(77억5284만여명)의 약 2.5%가 확진된 셈이다.

세계 누적 확진자는 올해 1월 26일 1억명을 넘고 반년 만에 다시 1억명이 늘었다. 첫 보고 후 누적 확진자가 1억명이 될 때까지 1년이 넘게 걸렸는데 그 뒤로 또 1억명이 늘어나는 데는 기간이 절반밖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

월드오미터 기준 대륙별 확진자는 아시아가 6278만5000여명으로 최다다. 이어 유럽(5183만여명), 북미(4291만1000여명), 남미(3564만9000여명), 아프리카(686만1000여명), 오세아니아(10만9000여명) 순이다. 국가별 확진자는 미국이 3600만 9000여명으로 제일 많다. 이어 인도(3176만7000여명), 브라질(1998만5000여명), 러시아(633만 4000여명), 프랑스(617만8000여명) 순이다.

델타 변이 탓에 각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터라 확진자 증가세는 다시 가팔라질 전망이다. 지난 2일 기준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확진자'는 60만1000여명이며, 82만6000여명으로 정점이었던 지난 4월 28일의 70%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날까지 세계 누적 사망자는 425만6000여명으로 집계됐다.

다른 국제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1억 5000만여명으로 세계인구의 14.8%로 나타났다. 1회차라도 접종한 사람까지 합치면 22억3000만명으로 세계인구의 28.6%다. /연합뉴스



미국 뉴욕 중심가의 한 식당 입구에 3일(현지시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욕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식당이나 헬스장, 공연·유형장 등 실내시설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백신접종 증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베트남, 코로나 4차 유행...5세 이하 5%

베트남에서 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하는 가운데 수도 하노이에서 나온 확진자 중 어린이들이 다수 포함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4일 하노이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4차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신규 확진자 중 5세 이하 어린이의 비율은 5%로 집계됐다. 이는 과거 1~3차 유행에 비해 높은 수치라고 보건당국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4차 유행을 통해 전파중인 델타 변이의 강한 전염력에서 어린이 감

염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감염된 어린이들 중 다수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일부는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노이 국립 어린이병원의 판 후 록 박사는 자녀들이 올바른 위생 습관 및 방역 수칙을 실천하도록 부모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은 지난 3일 신규 확진자 8377명이 나왔으며, 누적 확진자는 17만512명으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인도 하층민 9세 여아 집단 성폭행·살해 '발각'

힌두 승려 등 4명 체포...“가족 동의 없이 시신도 화장”

인도 뉴델리에서 최하층민인 달리트(불가촉천민) 출신 9세 여아가 집단 성폭행당한 뒤 살해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연일 시위가 이어지는 등 민심이 들끓고 있다.

4일 NDTV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뉴델리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힌두교 승려 1명과 화장장 직원 3명 등 남성 4명을 성폭행,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1일 뉴델리 남서부 지역 화장장에서 물을 구하러 온 9세 여아를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무단으로 시신을 화장한 혐의를 받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사건 당일 여아의 어머니를 불러 아이가 감전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될 경우 의사가 부검 과정에서 장기를 몰래 팔 것이라고 겁을 준 후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현지에서는 며칠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수백 명의 시위대는 '어린 소녀에게 정의를' 등의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시위대는 체포된 4명을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치인도 격양된 목소리를 냈다. 아르빈드 케지리वाल 텔리 주총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아만적이며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텔리의 법질서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범인들에게는 최대한 빨리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편 지도자인 라홀 간디는 자신의 트위터에 "달리트의 딸 또한 국가의 딸"이라고 썼다.

2억명으로 추산되는 인도의 달리트는 힌두 카스트 체계의 최하위 계층으로 브라만(성직자), 크샤트리아(군인), 바이샤(평민), 수드라(천민) 등 전통적인 카스트 분류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핍박 받는 이들이다.

인도는 헌법을 통해 카스트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인도 사회에는 아직도 카스트 관련 폐해가 뿌리 깊게 남아있다. 인도에서는 2012년 '뉴델리 여대생 버스 성폭행·살해 사건' 발생 후 성폭력 근절 목소리가 커지고 처벌도 강화됐지만, 관련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중국, '과장 광고' 이케아에 3억원대 벌금

중국 당국이 스웨덴 가구사 이케아가 특정 커튼 제품에 대한 과장 광고를 했다면서 3억원대 벌금을 부과했다.

4일 베이징청년보 인터넷판 등에 따르면 상하이 시장관리국은 이케아가 중국의 광고법을 어기고 과장 광고를 했다면서 172만 위안(약 3억1000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시장관리국은 이케아가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자사의 '군리드'(GUNRID) 커튼이 공기 정화 기

능이 있다고 홍보했지만 공기정화 기능은 특정한 실험 조건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났다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케아는 전날 중국 지역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올린 성명에서 "공기정화 기능 홍보가 소비자들을 오도할 가능성을 있다는 점에 깊게 주의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결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덕남동, 임야

-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 임야 661㎡, 지분매매
- ▶ 매매 - 6000만원

오피스텔 신축부지

- ▶ 신안동, 대지 582㎡(구 176평), 상업지역
- ▶ 지하1 지상10층, 15평, 72개 허가득
- ▶ 법인 양도·양수 가능
- ▶ 분양/임대 100%될 장소
- ▶ 매매 - 협의

문의. 010-3605-5000